

KINU 정책제안서 12-09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 정책제안서(12-09)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기획·디자인·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5(직통)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 정책제안서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허문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동원(국방대학교 교수)

심승우(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	1
2. 주요 연구결과 .....	3
가. 김일성시대 북방삼각관계: 形成(형성)과 瓦解(와해) .....	4
나. 김정일시대 북방삼각관계: 復元(복원) .....	6
다. 김정은시대 신북방삼각관계 전망: 強化(강화) 또는 形骸化(형해화) .....	9
3. 정책제언 .....	11
가. 고려사항 .....	11
나. 정책제언 .....	14
4. 기대효과 .....	15
참고자료 .....	17



## 1. 배경 및 문제점

동아시아 질서가 변화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이 점차 쇠퇴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2012년 1월 5일 중국의 지역접근저지(Anti-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전략지침(New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향후 10년 간 미국이 추구할 새로운 방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나이(Joseph S. Nye)는 ‘21세기 권력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아시아의 복귀’를 지적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유럽(대서양) 중심에서 (동)아시아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다<sup>1)</sup>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한 유럽 중심의 사고보다는 전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세계 총생산의 1/4을 차지하며, 세계 외환보유고의 2/3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과 G2국가로 부상한 대륙세력인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다. 미국을 중심에 둔 남방삼각동맹 구도는 1951년에 체결된 <미일 단독강화 조약> 및 <안전보장 조약>, 그리고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1965년에 조인된 <한일 기본 조약>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북방삼각동맹 구도는 1950년의 중소동맹과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한반도의 분단선을 가로질러 지금까지 세력균형 체제를 형성·유지하고 있다.

왈츠(Kenneth N. Waltz)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 체제에서 자국의 생존 확보를 위해 개별 국가들은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과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을 추구한다. 경제발전, 군비증강, 전략개발 등이 전자의 예라면, 자신의 동맹강화 전략 및 상대방의 동맹약화 등이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내적균형은 전통적인 경성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대표적인 수단은 군사력 증강, 핵능력 증강, 군비 경쟁 등과 비군사적 균형 전략으로서 경제발전을 포함한다. 결국 무정부 상태에서 자력구제를 통해 생존을 추구해야하는 국가들은 그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개별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균형화 행위를 하게 되며,<sup>2)</sup> 이러한 행위들이 합해져 체제수

1) Joseph S. Nye, “Obama’s Pacific Pivot,” December 6, 2011,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bama-s-pacific-pivot>>.

2) 세력균형은 ‘균형(balance)’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하나의 서술적 용어로서, 특히 근대

준에서 세력균형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sup>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균형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김일성시대에는 내적균형 전략으로 ‘자주·자위·자립’의 기치 아래 생존을 도모했다. 반면 외적균형 전략으로 북방동맹체제에 기반하여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립·집행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가발전 지향, 이데올로기 중심의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구조적 또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계추 외교를 통해 북한의 국익을 추구하고, 또한 협상에서의 우위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1984년에는 미국이 중국과 힘을 합쳐 소련을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자, 북한은 소련에게 나진항과 청진항을 군항으로 사용하는 권한과 더불어 북한 영공을 통한 항공정찰을 허용해주는 대신 수십억 달러의 군수 지원을 얻어낸 적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반소 제휴로 고립된 소련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김정일시대 북한은 ‘강성대국(強盛大國)’ 기치 하에 개혁개방으로의 적극적 정책 전환보다 ‘주체형 대외개방’ 또는 ‘소극적 개혁·적극적 개방 정책’을 선택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외부위협에 대한 내적균형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미국의 강압정책에 대항하여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돌파 전략(breakthrough strategy)을 선택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력 증강은 가장 전형적인 내적균형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사망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삼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한 것도 균형화 전략의 하나이다.

김정은시대의 대외정책은 김정일의 후반기 정책 기초를 계승하여 당분간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중국 무역 편향 및 정치적 의존도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

---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식되기 시작한 ‘평형(equilibrium)’ 상태를 의미한다. 즉, 두 개의 국가 또는 국가군 사이의 힘이 대등하여 어느 한 쪽도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왈츠의 제자인 스테판 왈츠(Stephen Walt)는 왈츠의 세력균형론에 중대한 수정을 가한다. 바로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이론이다. 국가들이 힘을 균형화하는 이유는 바로 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왈츠는 그의 위협균형이론이 세력균형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 5.

러 노력들을 동시에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북방외교 및 서방외교를 주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남방외교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후원 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 북중 관계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상호 간 관리 차원에서 동맹의 ‘내적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외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동맹의 ‘외적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방삼각관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전망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 시기까지를 김일성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 북한의 대중소 정책과 북방삼각관계의 구조적 특징을 ‘김일성시대 북방삼각관계’로 정리한다. 둘째, 김일성 사망 이후 2011년 김정일 사망 시기까지를 김정일시대로 설정하고, 이 시기 북한의 대중소 정책과 북방삼각관계를 ‘김정일시대 북방삼각관계’로 규정하여 분석한다. 셋째, 2012년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 이후를 김정은시대로 규정하고, 향후 북한이 구사할 내·외적 균형화 전략을 예측해 본 후,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대중리 관계 정립 방향과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이의 결과로 형성되는 ‘김정은시대 북방삼각관계’의 구성적 특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결과

북한의 균형화전략과 북방삼각관계를 시기별로 특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왈츠의 개념을 원용하여 무정부적 국제 체제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개별 국가의 전략을 내적균형과 외적균형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폴(Thazha V. Paul)<sup>4)</sup>과 페이프(Robert A. Pape)<sup>5)</sup>의 개념을 차용하여 탈냉전기 세계체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국가생존 전략을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으로 구분한다. 카이 허(Kai He)와 후이윤 핑(Huiyun Feng)의 개념을 도입하여,<sup>6)</sup>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각각을 균

4) Thazha V. Paul,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3, 13; Thazha V. Paul,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53, 56~57.

5) Robert A. Pape, “Soft balancing agains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36~37.

6) Kai He and Huiyun Feng, “If not Soft Balancing, Then What? Reconsidering Soft

사적 균형과 비군사적 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 가. 김일성시대 북방삼각관계: 形成(형성)과 瓦解(와해)

### (1) 중소 관계: 경성균형 형성과 와해

소련의 국가전략은 1947년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봉쇄 전략을 채택하자 그 대응차원에서 발전되었고, 중국은 소련의 국가 전략 틀 안에서 자신들의 국가 전략 목표를 가다듬었다. 이 당시 미국의 봉쇄 전략은 유럽에 집중되었고, 아시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봉쇄 전략의 세계화가 추진되었다.<sup>7)</sup> 여기에는 1949년 국공 내전을 승리로 이끈 중국공산정권의 수립도 한 몫 하였다. 소련은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1950년 2월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sup>8)</sup> 이 조약은 1945년 8월 4일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체결한 <중소 우호동맹 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이었다.<sup>9)</sup> 본 조약은 유효기간을 30년으로 하되, 체약국 중 한 나라가 조약 만료 1년 전까지 폐지를 통고하지 않으면 기한을 5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래로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 조약은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리고 1979년 4월 중국이 본 조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결정함으로써 1980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의 절차를 의미할 뿐, 사실상 중소 분쟁 당시 이미 <중소 동맹조약>은 형해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alancing and U.S. Policy toward China,” *Security Studies*, Vol. 17, No. 2 (2008), p. 373.

7) 대표적인 예로 트루먼 독트린, 마샬플랜, NATO, CENTO, SEATO,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상호방위조약,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 ANZUS 등이 있다. 미국은 린랜드 국가들과의 쌍무방위조약을 통해, 소련과의 대결구도를 정립했으며, 이에 대해 소련은 소중상호동맹조약, 바르샤바조약기구, 브레즈네프독트린 등을 통해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응했다.

8) 이 조약은 전문(前文)과 6개 조의 본 조약 및 두 개의 부속 협정·교환 각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련은 중국에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고 부속 협정에서 1952년 이전까지 창춘(長春) 철도의 일체 권리와 재산을 무상으로 중국에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9) 이 조약 외에 체결된 비밀 합의문을 통해 소련과 중국은 이념적 측면에서 군사적, 경제적 협력 자세를 공고히 했다. 특히 만주 지역을 놓고 중공은 소련의 특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소련은 만주 지역에 대한 중공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허만호, “6.25 전쟁의 유산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제도화,”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출판사, 2007), p. 225.

## (2) 북중 관계: 제한적 경성균형

중국은 1960년대 소련과 이데올로기 노선 및 국경분쟁 등을 거치면서 위협의 대상으로 소련의 수정주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연미제소(聯美制蘇) 전략이 그것이다.<sup>10)</sup> 한편, 북한은 한미 동맹의 외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의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은 냉전시기 미국과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특히 1960년부터 본격화된 중소 분쟁은 중국과 구소련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던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위협 인식을 심화시켰다.

한 국가의 동맹 행위는 공동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과 동맹 파트너 상호 간 이해갈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61년 북중동맹의 형성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 취할 행보를 조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예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중국은 자동군사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약 제2조와 상호협정의 및 통보를 규정한 제4조를 동시에 마련하였다. 따라서 북중 조약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적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향후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 (3) 북소 관계: 제한적 경성균형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부터 1980년 말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정치·외교·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지원국이였다. 물론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부침을 거쳐왔다.<sup>12)</sup>

냉전이 해체되어 가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의 국가 목표는

10)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 276.

11) 이상숙, “북중우호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양국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11 참조.

12) 고르바초프 이후 대북한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호, “한-소 국교수립과 북한: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제11권 4호 (2003) 참조. 이러한 미국 및 서방 중심의 대외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푸틴의 집권이었다.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남한과의 사회주의 통일 비중이 낮아지고, 체제생존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를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체제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기존 적대 진영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핵개발로 상징되는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이었다. 소련의 개방화와 남한과의 수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던 무기 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소련과의 유대관계 해체는 북한이 홀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야 한다는 안보불안을 초래했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내적 경성균형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제 당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1990년 9월 북소 관계의 단절은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1차 북핵 위기사태는 경성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벼랑 끝 전술이었다.

## 나. 김정일시대 북방삼각관계: 復元(복원)

### (1) 중러 관계: 느슨한 경성균형의 복원

중러 양국은 1980년에 실효된 군사동맹 성격의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격의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을 2001년 7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다. 지난 1989년 중소 화해가 실현되었으나, 소련 붕괴 이후 중러 간에는 새로운 기본조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21년 만에 체결된 것이다.

중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복원을 선언하고, 양국 간 국경획정의 확인, 상호 영토존중, 국경지역 주둔 병력의 감축 등 신뢰증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1극 지배'에 대항하는 '다극화 세계'의 창설을 지지하고, 양국 간 경제무역, 과학기술면에서 협력을 촉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 조약을 통해 양국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구상에 대해 공동으로 견제할 것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어느 일방이 (제3국에게서) 공격받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신속히 연락을 취해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외부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내부에서는 군사교류 및 경제협력을 통한 내적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러 간 준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외적균형도 함께 강화시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남방삼각동맹 체제에 맞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균형을 모색하였다.

## (2) 북중 관계: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결합

1990년대 들어와 북중 관계는 중국의 대북 구상무역 포기과 경화결제 요구(1991), 한중 수교(1992.8.24), 김일성 주석 사망(1994.7.8)에 따른 양국지도자 친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소원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공식출범 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대중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 장쩌민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와 개혁 개방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상호입장을 조율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였다.

중국이 북한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2003년 초 북한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표면화되었다. 북한의 국가적 위상은 전략적 요충의 가치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아로서의 이중적 성격이 동시에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나, 전략적 부담이나에 대한 논쟁이 유발되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고위급 교류는 지속되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3년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였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방북 시,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전략적 방침’임을 합의하고, 고위층의 상호방문을 통한 협상채널 구축, 교류 영역 및 협력확대, 적극적 협조를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내정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하여<sup>14)</sup>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sup>

13)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 4, Issue 5 (March 4, 2004);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 2009), pp. 5~7.

14) “胡錦濤同金正日舉行會談,” 『人民日報』, 2010년 5월 8일.

15) 5가지의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급 왕래를 지속한다. 양국지도자는 상호방문, 특사파견, 구두서신 교환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양국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의 내정, 외교의 중대 문제, 국제 및 지역정세, 당과 국가의 통치(治黨治國) 경험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을 강화한다. 셋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한다. 양국정부의 유관부서는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한다. 넷째, 인문교류를 확대한다. 양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영역의 교류, 특히 청소년 간의 교류를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추 전통적 우호를

### (3) 북러 관계: 연성균형의 복원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러시아에서도 옐친 대통령의 조기 사임 후 푸틴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북러 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이바노프(Ivanov) 외무장관이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러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10년 만에 관계를 재정립하였다.<sup>16)</sup> 이러한 북러 관계의 재정립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세력관계에 있어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부시의 집권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과 체제 불안정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벼랑 끝 외교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런 내적균형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체제생존 및 경제발전을 확보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압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및 대미·대남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sup>17)</sup>

한편,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소외 등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대서방 편향 외교에 대한 자체 반성 분위기가 일어났고, 특히, 4차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주도로 러시아가 배제된 것은 러시아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후 북러 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추락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는 동북아 지역, 더 좁게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푸틴 시대에 들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통한 영향력 회복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대를 이어 계승한다. 다섯째,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16) 옐친 대통령은 1992년 로가초프 외무차관을 평양에 보내어 이 조약의 제1조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존속되는 경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분쟁에 항상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대미 및 대한민국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제반관계의 확대를 위한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이 절박하다는 러시아 측의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까지 이 조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여인곤,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27.

17) 이동형,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pp. 150~151.

## 다. 김정은시대 신북방삼각관계 전망: 強化(강화) 또는 形骸化(형해화)

### (1) 중러 관계: 연성균형과 느슨한 경성균형의 병행

중러 양국은 아시아 중시 기조를 천명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sup>18)</sup>의 대외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지키고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G2로 급부상한 중국과 시베리아 개발을 통한 경제력의 도약을 노리면서 공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형적인 연성균형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강한 러시아’를 모토로 제3기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2014년 러시아연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전면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비를 80% 가까이 증액할 계획이다.<sup>19)</sup> 미국을 겨냥한 본격적인 군사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적균형은 경제성장 또는 군사력의 증대로 인해 국력이 성장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내적균형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경제력 상승이 군사력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국방의 대폭적인 강화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국 패권에 대한 양국의 내적균형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담에 참가한 푸틴은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더욱 격상시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현실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주도력을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미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력체제는 군사적·비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중국이 청진항과 나진항 부두를 임차하고 2011년 초, 중국 군함이 나진항을 방문하자 러시아는 중국이 동해와 한반도를 자국의 작전책임 지역으로 만들

18)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Deputy Secretary Steinberg on U. S. Policy toward Asia,”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fa=eventDetail&id=3-45>>을 참조.

19) 김영진, “푸틴의 복귀를 앞둔 러시아 경제: 전망과 과제,” 『e-Eurasia』, Vol. 37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12).

20) Keir A. Lieber and Gerard Alexander, “Waiting for Balancing: Why the World is not Pushing Back,”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Summer 2005), pp. 109~139.

려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sup>21)</sup>

### (2) 북중 관계: 제한적 경성균형과 동맹 내적기능 충돌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최고통치자로 17년 간 군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향후 북중 관계, 특히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최대 딜레마는 북한 정권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은 중국의 이해에 상반되지만 그러한 김정은정권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불가피성(불확실성과 대안부재)에 있다.<sup>22)</sup>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를 경제협력과 지지획득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시대 북중 동맹조약이 갖는 의미는 외적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내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조약 내지는 상대방의 미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리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동맹조약 체결 이후에도 외적 위협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곤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기대하는 북중동맹이란,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북한에 인적·물적·정치·외교적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북한의 ‘혁명전략’에 대한 약속을 철회했으며,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화’와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전략대화를 꾸준히 진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시대 북중 관계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동맹의 내적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외부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동맹의 외적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 북러 관계: 연성균형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특별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방침을 언급하면서 외교관계의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정은시대 경제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세안정이 무엇보다

21) 심경옥, “김정일 이후 북한과 러시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1.12.20), p. 3.

22) 중국의 속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4월 17일자 신문에서 “평양이 터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대북인식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2012년 4월 17일.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략과도 부합되는 사안이다. 북한은 대중 협력과 마찬가지로 대러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협을 약화시키면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가치와 위상을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응할 수 있는 중러 관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개될 6자회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냉전시기의 동맹과는 다른 차원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한국·미국·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북한·중국·러시아를 또 다른 한 축으로 대립하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신냉전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sup>23)</sup>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양·다자 관계를 형성하여 미국을 견제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군사동맹보다는 경제동맹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과 비군사적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말해 양·다자 관계를 통해 새로운 연성균형을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 3. 정책제언

#### 가. 고려사항

북방삼각 동맹관계는 해양세력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소(러)의 균열과 북한의 모험주의에 따라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한 중소(러)는 북한과의 동맹조약을 끝까지 공약해 주지 못했다. 북한은 남방삼각 동맹구도에 맞서 체제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내적균형 전략으로서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적균형 전략은 북한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나, 외적균형은 중소(러)의 의지에 이끌려 가는 형국을 보여주었다. 다만, 일시적으로 중소(러)가 분열되었을 때,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한 바 있다.

23)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책 전망과 남북관계,”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제84호 (2012), pp. 9~17.

그러나 중립이 화해한 지금, 북한으로서는 비대칭 무기를 제외하고서는 외부위협에 대처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김정은 체제가 깊어지고 가야할 북방삼각동맹 관계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 1>는 북방삼각동맹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모형으로서 외부위협에 대한 균형화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표 1> 분석모형: 외부위협에 대한 균형화 이론

구분	경성균형		연성균형	
	군사	비군사	군사	비군사
내적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비 경쟁</li> <li>• 군사력증강</li> <li>• 핵능력증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심단결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결속 강조</li> </ul>
외적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형성 및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국 경제지원</li> <li>• 동맹국 기술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군사 훈련</li> <li>• 위협국 라이벌에 무기판매</li> <li>• 무기통제 협상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제도 활용</li> <li>• 경제적 수출금지</li> <li>• 경제제재</li> <li>• 경제협력</li> </ul>

김일성시대 북한은 소련과 중국 등 외세의 내정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내적균형 전략으로서 ‘사상에서의 주체(1955.12.28),’ ‘경제에서의 자립(1956.12.11),’ ‘정치에서의 자주(1957.12.5),’ ‘국방에서의 자위(1962.12.10)’를 모토로 내걸었다. 1966년 당 이론지인 『근로자』에 ‘자주성을 옹호하자’란 제하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이 글을 보면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의 관계를 옹계 처리하려면 형제당들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완전한 평등, 자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 협조 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년 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로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 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국주의는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sup>24)</sup>

24) “자주성을 옹호하자,”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pp. 15~16.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은 안정적인 경제·군사적 지원을 상실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은 1962년 ‘경제·군사 병진 노선’ 채택에 이어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를 열어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등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확립하고 자주적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sup>25)</sup> 한편, 북한은 외적균형 전략으로서 진영·동맹 등의 생존외교를 전개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정치·군사적 교류를 지속하되, 중국,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남북삼각동맹 구도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진행한 반면,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키지 못해 남방외교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제적 고립으로 나타났고, 외부위협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켰다. 정치적 고립, 경제적 낙후는 한국과의 체제경쟁, 군사력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았으며, 이른바 비대칭 무기의 개발을 통한 균형을 추구하게 되었다.

김정일시대 북한은 내적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력 강화를 의도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며, 외적균형 전략의 하나로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비록 과거 구소련과의 동맹조약에서 나타난 자동개입조항은 없을지라도,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신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북러 신조약은 외적균형 내에서 추진된 비군사 균형 정책이다. 포괄적으로 북러의 관계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응하려는 연성균형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연성균형 방법은 패권국의 군사적 우월성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의 월등한 권력사용을 지연, 약화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가리킨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김정일이 물려준 토대를 기반으로 큰 틀의 변화 없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권교체 추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불거진 중일의 영토분쟁이 초래한 동북아의 갈등구도가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조절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내부자원이 한계에 봉착한 이상, 외교적 자율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5)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확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 비율을 보면 1962년을 기준으로 1965년에는 3배, 1971년에는 4배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67~1971년 사이 국방비는 5년 연속해서 예산의 30%~32%(GNP의 20~25%에 해당)를 유지했다.

## 나. 정책제언

국가의 대외전략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데 있다. 북한 체제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보존하고, 국가 이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 제1의 목표다. 향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지(will)’와 ‘능력(power)’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의 의지는 강렬하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단은 극히 미약하다. 능력에 기반하지 않는 의지는 한 날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핵외교도 사실,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주’는 국방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위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자주’는 나 스스로를 지키는 협소한 의미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수단을 동원하여 나를 지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향후 북한이 취할 균형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삼각동맹 구도는 동북아의 영토갈등, 민족주의 대두, 미중 간 경제주도권 경쟁, 북핵실험 및 우발적 군사적 충돌 등의 요인에 따라 강화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남방삼각동맹에 의지하여 북방삼각동맹의 변화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독도문제를 위시한 한일 간의 갈등을 축소시켜야 한다. 남방삼각동맹의 균열은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면 미일이 추진하는 MD 체제의 편입은 북방삼각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여, MD 체제 편입보다는 독자적 방위를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 및 강화시킨다. 북중은 김정일 생존 당시부터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일단 안착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 여부는 북한 인민의 생존권 및 경제난의 극복에 달려 있다. 대외무역의 90%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을 전개할 수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억제할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 일로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3성 개발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방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군사협력 대화 및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한중 간의 이어도 문제, 불법 어업 등 긴장을 초래할 요인들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UN 안보리 ‘대북결의안(2005.7.16)’ 및 ‘대북제재 결의안(2005.10.15)’에 기초해 전략물자의 대북 반입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소원해진 러시아와도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북방삼각동맹 구도의 내부적 견제는 러시아의 역할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영향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철도연결은 푸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숙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시베리아 중국이주민 증가 현상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북한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차단을 위해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처럼 시계추 외교를 전개하고자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넷째, 한국의 북방외교 정책은 연성균형 전략에 기초하여 전개해야 한다.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때, 북방삼각동맹은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되, 북한의 정책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명분과 실리를 보장해 줄 경우, 의외로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상생의 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북방삼각동맹 구도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외부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에 따라 나타난 동맹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띠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교정책을 선보였다. 중소(러)가 갈등관계로 진입할 경우, 나름대로 독자적 대외 자율권을 누렸지만, 중소(러)가 갈등이

아닌 협력구도를 전개할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반면, 외교적 자율성은 오히려 침해를 받아 왔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북방삼각동맹은 강화보다는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주변 4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이론을 보다 정교화시킬 경우,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여인근.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2. 논문

김성호. “한-소 국교수립과 북한: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평화연구』. 제11권 4호(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03.

김영진. “푸틴의 복귀를 앞둔 러시아 경제: 전망과 과제.” 『e-Eurasia』. Vol. 37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12.

심경욱. “김정일 이후 북한과 러시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1.12.20.

이동형.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이상숙. “북중우호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양국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11.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책 전망과 남북관계.”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제84호, 2012.

허만호. “6.25 전쟁의 유산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제도화.”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출판사, 2007.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 2, 2009.

Kai He and Huiyun Feng. “If not Soft Balancing, then What? Reconsidering Soft Balancing and U.S. Policy toward China.” *Security Studies*. Vol. 17, No. 2, 2008.

Keir A. Lieber and Gerard Alexander. “Waiting for Balancing: Why the World is not Pushing Back.”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Summer 2005.

Robert A. Pape. “Soft balancing agains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Thazha V. Paul.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Thazha V. Paul.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 4, Issue 5, March 4, 2004.

### 3. 기타자료

Joseph S. Nye. "Obama's Pacific Pivo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bama-s-pacific-pivot>>.

Joseph S. Nye. "Deputy Secretary Steinberg on U. S. Policy Toward Asia."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fa=eventDetail&id=3-45>>.

『人民日報』.

『환구시보(環球時報)』.

『근로자』.